

미국 경제의 나홀로 호황, 내년까지 이어질까?

송준

jsong@lgb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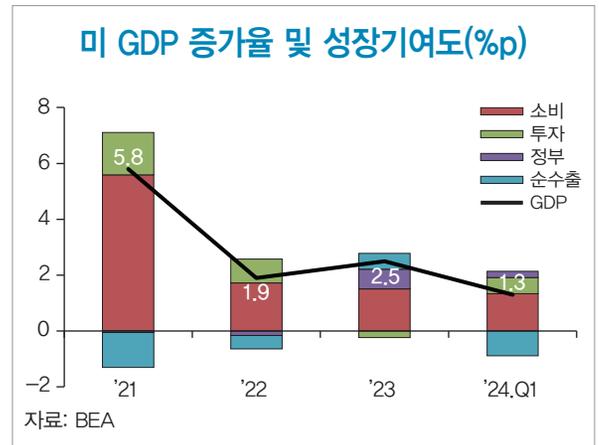
팬데믹 이후 미국 경제는 주요 선진국을 뛰어넘는 '나홀로 호황'을 보였다. 고물가와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기간 축적된 막대한 초과 저축과 주식 및 고용 시장의 호조가 견고한 소비 흐름을 유지시켰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 전쟁 지원을 위한 국방비 지출 증가도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내년에는 경제 둔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초과 저축이 모두 소진되었고, 증시의 고평가로 인해 빠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방비 지출도 내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가 재집권할 경우, 감세와 전통 에너지 투자 확대가 일부 부양 효과를 줄 수는 있겠지만, 해외 노동력 유입 축소,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부담, 그리고 재정 리스크 증가로 경기 둔화가 심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증가가 지속되고 금리 인하 및 인플레이션 완화로 소비와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급격한 경기 후퇴는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 경제는 팬데믹 이후 현재까지 급격한 금리인상과 고물가 지속에도 불구하고 강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 4분기 이후 올해 1분기까지 미국 GDP는 8.6% 증가했다. 다른 대부분 선진국 성장률의 두 배¹ 이상에 달하는 ‘나홀로 호황’의 모습을 보여준 셈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여줬다는 점이다. 작년 연초에 블룸버그에서 집계한 2023년 미국경제 성장률의 컨센서스는 0.3%로 연중 침체를 겪을 것이란 전망이 다수였다. 그러나 이런 예상이 무색하게 미국은 2023년 2.5% 성장하면서 2.1%내외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²마저 뛰어넘는 호황세를 보였다.

이러한 미국 경제 호조의 배경을 가계, 기업, 정부, 대외부문 등 경제 주체별 영향을 준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각각에 대한 전망을 통해 미국경제 호황이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판단해 보고자 한다.



1. 미국 호황의 배경

(1) 가계: 막대한 초과저축, 견조한 순자산 증가, 고용시장 호황, 고정금리 대출

미국은 민간 소비가 전체 GDP의 68%(2008년 이후 평균)에 달하는 소비 위주의 경제다. 따라서 가계의 소득, 자산 등의 변화가 전체 경기 변동을 좌우하는 특징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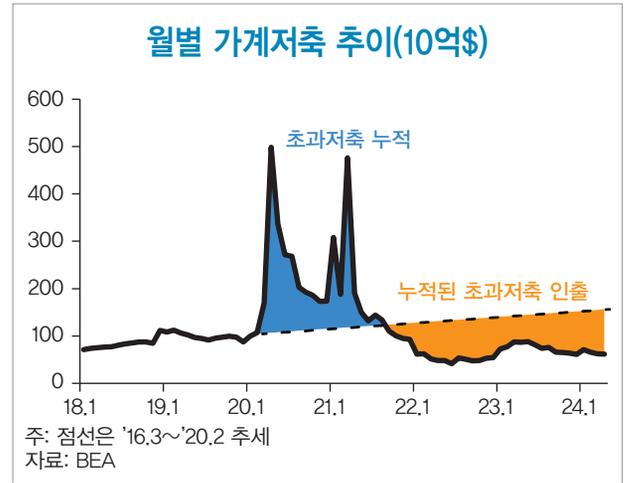
팬데믹 경제 위기라는 전례 없는 사태를 맞아 미국 정부는 2020년 4월~2021년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총 3.3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부양책을 집행했다. 여기에는 긴급 생계비 지원, 실업보험 및 자녀부양 세액공제 확대 등 가계의 현금보유를 늘려주는 정책이 포함됐다. 팬데믹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쇼핑 외에 여행, 외식 등 서비스 소비를 할 수 없었던 가계는 이 중 상당 부분을 저축하였고, 팬데믹 이전 저축 증가 추세를 상회하는 누적액이

1 캐나다 4.4%, 독일 0.3%, 스페인 3.7%, 일본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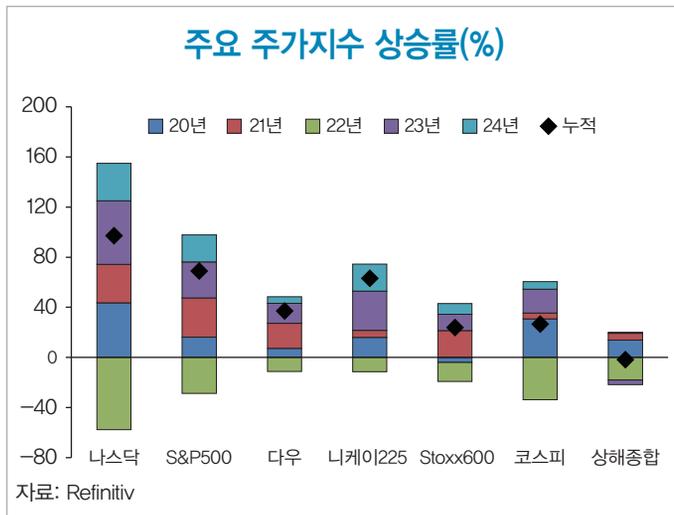
2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가능한 생산수준인 잠재GDP의 증가율

2021년 8월 기준 2.1조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2021년 미국 GDP 23.6조 달러의 9%에 달하는 규모로 이후 초과저축이 소비에 쓰이면서 미국 경제를 강하게 견인했다.

주식시장 호황도 견조한 소비의 배경이 됐다. 가계가 현재 소비 대신 저축을 하는 이유는 결국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다. 유동성이 높은 자산은 직접 현재 소비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원이 되며, 유동성이 낮은 자산의 경우 미래 소비를 위한 자금원이 되어 자산시장 호황은 현재의 소득을 저축보단 소비에 활용할 유인을 높여준다. 미국 주식시장은 팬데믹 기간 비대면 소비에 적합한 기업들이 다수 분포돼 있었고, 최근에는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기대감 등이 더해져 대형 IT, 통신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 대비 강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2020년 이후 지난 6월 21일까지 S&P500지수는 69%, 나스닥 지수는 97% 상승해, 타국의 주식시장을 압도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러한 자산시장 호황으로 인해 가구의 순자산도 작년 4분기 말 기준 팬데믹 이전 대비 34%나 증가했고, 인플레이션을 차감해도 15%나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



현재의 소득을 저축보단 소비에 활용할 유인을 높여준다. 미국 주식시장은 팬데믹 기간 비대면 소비에 적합한 기업들이 다수 분포돼 있었고, 최근에는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기대감 등이 더해져 대형 IT, 통신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 대비 강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2020년 이후 지난 6월 21일까지 S&P500지수는 69%, 나스닥 지수는 97% 상승해, 타국의 주식시장을 압도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러한 자산시장 호황으로 인해 가구의 순자산도 작년 4분기 말 기준 팬데믹 이전 대비 34%나 증가했고, 인플레이션을 차감해도 15%나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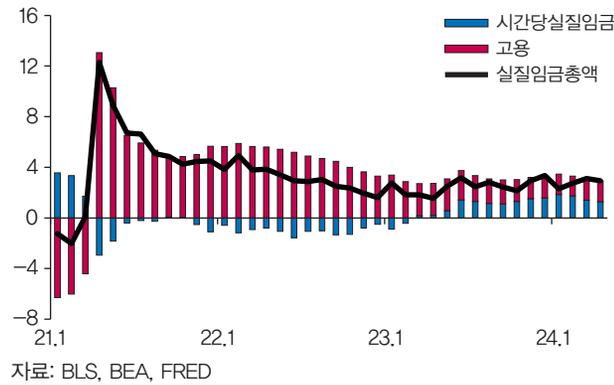
고용시장의 호조도 빼놓을 수 없다. 2021년 4월 이후 4%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이 2년여 간 지속되면서 미국 노동자의 시간당 실질임금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평균 0.9%(전년동기대비) 하락했고, 이는 많은 분석가들이 미국의 침체를 전망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동기간 강한 노동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체 고용은 평균 5.5%(전년동기대비, 1인당 근로시간 변화를 감안하면 5.3%) 증가했고, 그 결과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기간에도 미 노동자 전체의 실질임금총액은 평균 4.3% 증가했다.

이러한 고용 호조도 빼놓을 수 없다. 2021년 4월 이후 4%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이 2년여 간 지속되면서 미국 노동자의 시간당 실질임금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평균 0.9%(전년동기대비) 하락했고, 이는 많은 분석가들이 미국의 침체를 전망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동기간 강한 노동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체 고용은 평균 5.5%(전년동기대비, 1인당 근로시간 변화를 감안하면 5.3%) 증가했고, 그 결과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기간에도 미 노동자 전체의 실질임금총액은 평균 4.3% 증가했다.

이에 더해 저소득층의 임금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소비하는데, 미국은 경기사이클상 호

미국 경제의 나홀로 호황, 내년까지 이어질까?

실질임금 및 고용 증가율(% ,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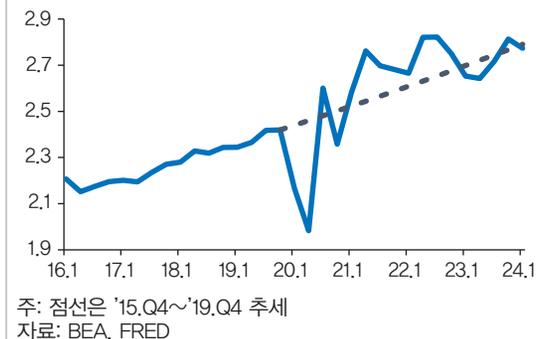
황기에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높고, 불황기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높은 경향을 보여왔다. 이번 호황기도 예외는 아니었다. 2020년 이후 지난 3월까지 하위 25%의 임금은 연평균 5.6% 상승해, 연평균 3.9% 상승에 그친 상위 25%에 비해 빠르게 올랐다. 이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성향도 미국경제의 높은 성장세에 기여했다.

인플레이의 영향으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도 전체 노동자의 임금총액을 줄이지 못했다면 급격한 금리 인상이 미친 부정적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지출은 2021년 3월 1.2% 수준이었으나, 지난 4월 2.4%로 두배 증가했다. 그러나 과거 두 차례 금리인상 정점기인 2000년 3.1%, 2007년 2.9%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미국 가계 부채의 72%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이 92%에 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신용대출, 또는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가계에는 이자부담이 크게 다가왔을 것이나, 기존의 고정금리 대출 보유자들은 금리인상의 영향을 크게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이들의 경우 보유현금에 대한 이자 수익 증가로 인해 수혜를 누렸을 가능성이 크다.

(2) 기업: 견조한 이익증가와 그에 기반한 이자소득 증가

미 기업의 견조한 이익증가세도 호황의 배경이 됐다. 미 법인기업의 실질이익 증가율은 2020년 2.5% 감소한 이후 2021년 13.7%, 2022년 2.6%, 2023년 2.3%로 상승폭은 둔화되었지만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팬데믹 시절 생산물류 차질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유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 고금리 등 고비용 환경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견조한 이익 증가세는 강한 노동수요로 이어져 미국 가계 소득 증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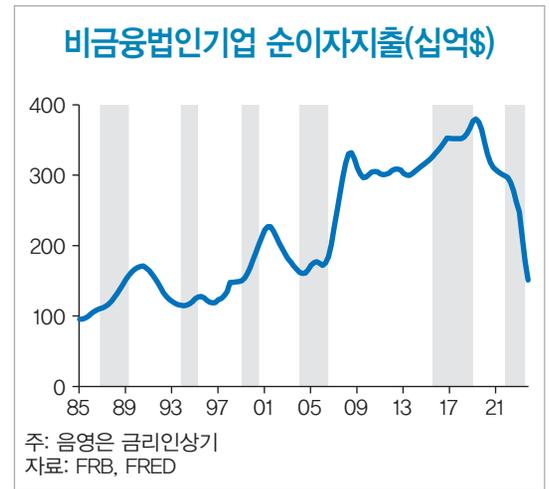
미 법인기업 실질이익(조\$, '17년\$ 기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습을 보여주었다.

노동수요와 달리 상대적으로 미국 기업의 투자는 팬데믹 이전에 비해 특별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2022년 8월 IRA와 반도체과학법 발표 이후 제조업 구조물을 중심으로 민간투자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2023년 비주거구조물에 대한 고정자산투자는 17% 상승해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이번 금리인상 사이클에서 미국 기업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순이자 지출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팬데믹 이후 회복과정에서 증가한 이익을 이자를 지급하는 자산에 투자하거나 부채를 줄이는데 활용한 기업은 이자부담을 상당히 덜게 되었다.³ 비금융법인기업 전체로 2019년 4분기 3,647억 달러에 달하던 순이자지출은 2023년 4분기 1,512억 달러(연율로 환산)로 크게 감소했다. 향후 초저금리 시절 발행한 회사채 등의 차환발행 등으로 이자부담이 결국에는 점차 증가하겠지만, 미국 기업 전체로 보면 현재까지 고금리의 충격을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



(3) 정부: 팬데믹 기간에는 가계 현금지원으로,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는 국방비 지출로 부양

미국 정부의 가계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은 2021년 중 대부분 종료가 됐다.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시작되면서 미국 정부는 다섯 차례에 걸쳐 총 2,095억 달러에 달하는 군수지원법안을 통과시킨 결과, 2023년 국방비는 실질 기준으로 3.4% 증가했다. 2011년~2019년 미 국방비가 연평균 1%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큰 폭의 증가세이다. 특히 지난 4월 통과된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지원법의 경우 953억 달러로 이전 법안들에 비해 규모가 커 올해 미 경제의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이다.

3 S&P500 기업의 경우 2021년 말 대비 2023년 말 에너지, 보건 의료, 부동산, IT 섹터를 중심으로 보유 현금이 크게 늘었고, 금융, 에너지, 산업재 섹터에서 부채가 감소했다.

(4) 대외부문: 수입에 비해 수출 회복 더더 경제성장에는 부정적 효과

순수출은 2023년을 제외하고는 GDP 증가에 기여하지 못했다. 팬데믹 이후 미국 소비자의 강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수입은 팬데믹 이전 추세로 빠르게 도달한 반면, 대외 수요 부진,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수출은 여전히 과거 추세에 못 미치는 더딘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도 팬데믹 이전 GDP 대비 2.7% 수준(2015~2019년 평균)에서 3.2% 수준(2022년 이후 평균)으로 확대되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가 해외직접투자 유입보다는 금융투자 유입으로 가능했다는 점이다. 2022년 이후 미국의 해외직접투자(FDI)는 GDP 대비 평균 0.2% 수준의 순수출을 보인 반면, 금융시장으로의 순수입은 GDP 대비 평균 3.0%로 높은 수준을 보이며 미국 증시 호황을 뒷받침하는 한편 무역수지 적자를 가능케 했다.⁴

2. 향후에도 미국의 호황이 지속될 수 있을까?

향후에도 미국 경제의 호황이 지속될 수 있을 지는 앞서의 호황의 배경으로 지목된 경제주체별 요인들에 대한 전망을 통해 판단해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물가, 금리 및 금융시장의 향방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는 미국 대선이 있는 해로 차기 대통령과 의회 구성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미국 경기 흐름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서술의 편의상 현재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바이든 2기 정부 출범과 분할된 의회⁵를 상정하되,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시 달라질 전망도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⁶

가계: 초과저축 소진, 주식 시장의 밸류에이션 부담, 트럼프 재등장은 소비 둔화 요인

미 경제 호황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던 21년 8월 2.1조 달러에 달했던 초과저축은 올해 3월 기준 전액 소진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향후 가계 소비는 자산 시장 성장세와 근로소득 증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의 경우 이미 높아진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될 것이다. 대표적인 밸류에이션 평

4 팬데믹 이전 직접투자 순수입은 GDP 대비 0.9%, 금융투자 순수입은 GDP 대비 0.7% (2015~2019년 평균)로 과거 대비 금융시장으로 순수입이 크게 증가했고, 직접투자는 순수출로 전환됐다.

5 민주당, 공화당이 각각 상·하원 중 한 곳의 다수당이 되는 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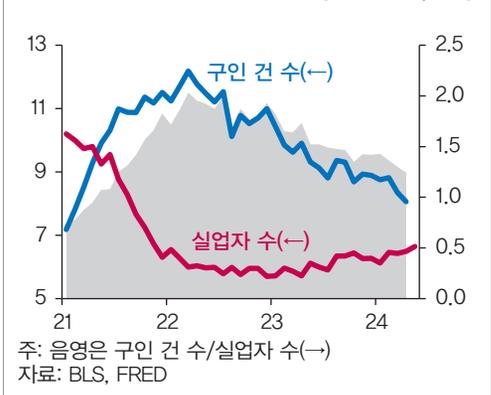
6 트럼프 정부 출범 시 변화에 대해서는 텍스트 배경에 음영을 추가해 구분했다.

미국 경제의 나홀로 호황, 내년까지 이어질까?

가지표인 실러 P/E지수⁷의 경우 6월 24일 현재 28.3으로 1999년 12월 닷컴버블 정점인 시가 44.2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주가 상승은 밸류에이션 확장에 기대하기 어렵고 기업이익 증가에만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AI 등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 고비용 구조 완화, 금리 인하기대 등 향후 긍정적인 요인들도 많아 주가가 급락하거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수년과 같은 빠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질임금의 경우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라 지난해 3월 이후 증가세로 반전되었고, 여전히 구인 건 수가 실업자 수의 1.2배에 달하는 등 고용시장 호조세도 지속되고 있어 향후 소비 증가의 버팀목이 될 것이다. 고용증가도 올해 평균 24.8만명 수준으로 팬데믹 이전 2019년의 16.6만명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향후 가구 전체의 임금 총액의 증가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계 소비의 원천이 노동소득 증가로 한정돼 미국의 소비증가율은 내년 1% 초중반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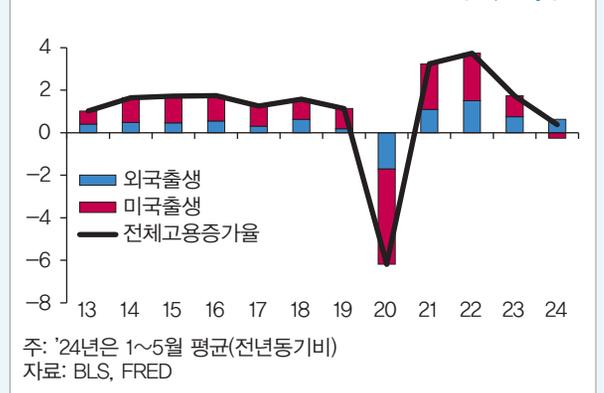
구인 건 수 vs 실업자 수(백만 명, 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설 경우 해외노동력 유입 둔화로 소비가 추가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트럼프 1기 정부에도 이민유입 제한으로 오바마 2기 대비 외국 출생자의 고용증가율이 낮아진 바 있다. 또한 팬데믹 이후 미국 고용호조의 상당부분은 외국 출생 노동력의 고용 증가에 기인해 향후 국경통제 강화 등으로 해외노동력 유입에 차질을 빚는다면 고용증가세 둔화로 소비 둔화 폭 또한 커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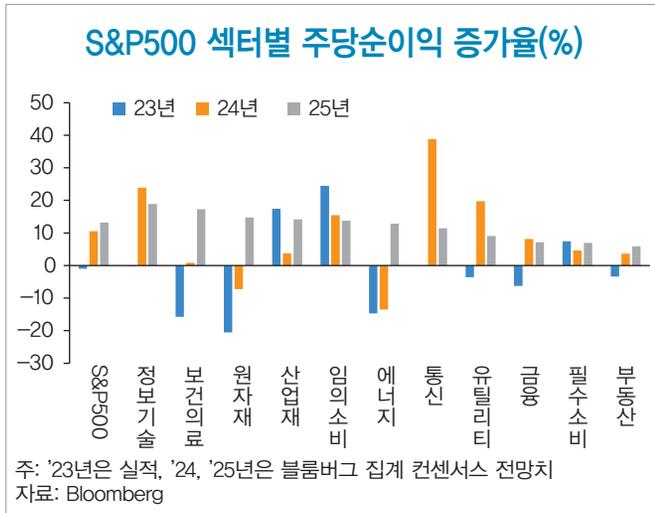
트럼프 정부의 관세 증가 또한 물가 상승 압력을 높여 가계 구매력에 부정적 영향을 줘 소비 둔화 폭을 키울 수 있다. 트럼프 후보의 경우 전 수입품에 대한 10% 보편 관세,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 미국산 수입품에 상대 국가 관세에 상응하는 상호주의적 관세 등 관세인상책을 연이어 공언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일부 업종의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나 경제 전체의 물가 부담을 높일 것이다.

내·외국인 고용증가율 및 기여도(% , %p)



7 주가를 과거 10년의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실질이익을 나눠서 계산. 높을수록 고평가를 의미함.

기업: 고비용 구조 완화로 실질이익 성장세 지속 예상, 트럼프 당선은 투자 확대의 변수



내년에도 인플레이 둔화와 고비용 구조 완화된 기업 실적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S&P500기업 중 실적발표에서 '경기 침체'를 언급한 경우도 22년 2분기 235건에서 24년 1분기 29건으로 7분기 연속 크게 감소해 기업의 투자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IRA 및 반도체과학법 발효 효과로 그 간의 구조물투자 증가에서 장비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도 기대된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설 경우 보조금 축소로 청정에너지 관련 분야 투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관세 인상은 고비용 구조를 유발해 투자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 다만, 법인세율 인하,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 완화 등 투자 개선에 긍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입장 차이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종료로 국방비 지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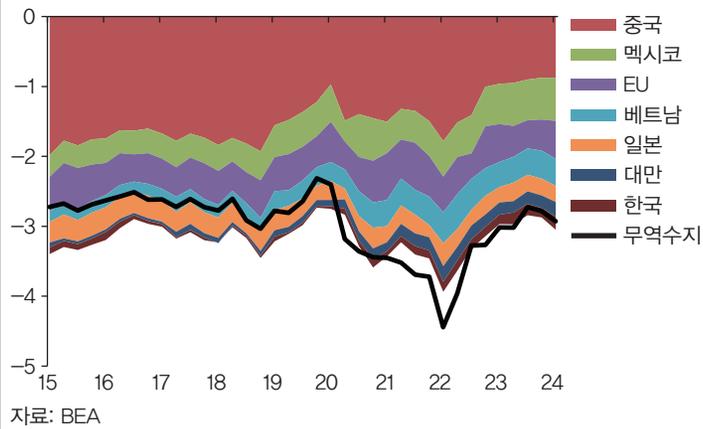
지난 4월 통과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대한 지원법은 올해까지는 국방비 지출을 늘려 경제성장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피로감과 양당의 입장 차이로 추가 지원은 난항이 예상되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설 경우 추가 지원은 더 이상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도 연내 휴전협상이 시작될 경우 별도 법안을 통한 대규모 추가 지원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내년 국방비 지출이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외부문: 무역수지 적자 축소 가능성, 트럼프 당선 시 한국 등 통상 리스크 확대

무역수지는 달러 강세 완화와 대외 수요 개선으로 다소 축소되어 내년 미국 경제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 미 금리인하가 시작되면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진행되어 온 달러 강세는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유럽과 일본 등의 경기도 내년에는 좀더

미국 경제의 나홀로 호황, 내년까지 이어질까?

미국 무역수지 (GDP대비 %)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 수출은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설 경우 최근의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를 근거로 관세 인상과 환율 조정 등 통상 압력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에 이어 최근 적자 폭 확대에 크게 기여한 멕시코, 베트남, 대만, 한국 등이 특히 타깃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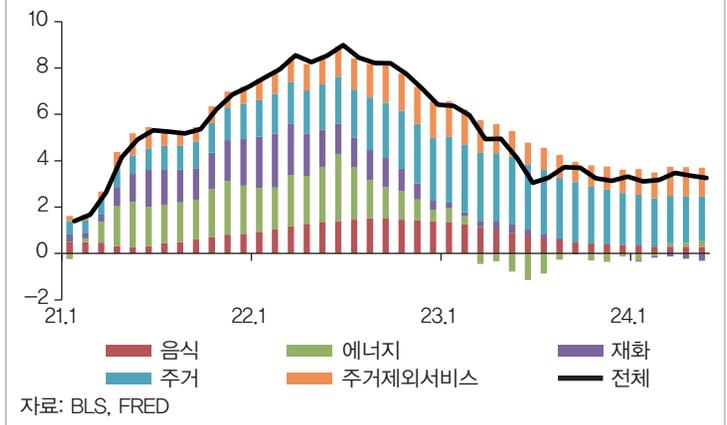
물가 및 금리: 인플레이션 완화되며 연내 1~2 차례, 내년 4차례 금리인하 예상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주도하는 것은 서비스 특히 그 중 주거비로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4% 중 2.0%p가 주거비 상승에서 비롯됐다. 현 지정학적 상황에서 공급측 교란으로 인한 추가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은 낮아 물가는 향후 주거비 등 서비스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따라 서서히 낮아질 것이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둔화에 맞춰 미 연준은 올해 1~2차례, 내년 4차례 금리인

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하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부담이 서서히 줄어들고, 동시에 소비 심리, 투자 심리도 개선될 가능성이 커 급격한 경기 둔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기여도(% , %p, 전년동월비)



다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설 경우 관세 인상으로 인해 물가 부담이 커지고 그로 인해 금리인하 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그에 따라 경기 둔화 폭도 커질 수 있다.

금융불안: 지방은행 부실 현실화 가능성 낮고, 자산시장 불안 가능성도 완화

지난해 3~5월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파산 이후 상업용 부동산 위험과 관련된 지방은행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후 현재까지 지방은행 주가는 하락

하고 주가 변동성도 높은 수준이 지속되는 등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중소형 은행의 예금인출속도가 감소하고 순이자마진이 다소 회복되는 등 개선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예상대로 올해 미 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서면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지방은행의 충당금 적립도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실물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정도의 금융불안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트럼프 당선 시 해외노동력 유입이 줄어 소득세율이 줄고, 감세 가능성도 높아 재정적자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그 결과 미국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통상 압박으로 인한 지정학적 분절화와 인플레이 지속, 금리인하 축소도 금융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

이상의 요인들을 종합하면, 미국은 내년에 경기는 둔화되나 침체는 피하는 소프트랜딩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 2% 초반대에서 1% 초중반대로 낮아지겠지만 급격한 경기후퇴를 겪지는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감세와 전통에너지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해외노동력 유입 축소, 관세로 인한 물가 부담 증가 등으로 소비 둔화 폭이 커지고 금리 인하도 지연될 수 있어 내년 성장률은 1% 내외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수출기업은 이러한 미국 경제 둔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생산, 투자, 마케팅 등 경영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거시경제 전반의 성장세 둔화는 기업 매출과 이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 수준의 급락은 아니라는 점, 인플레이 둔화로 고비용 구조가 완화되고 금리인하로 가계와 기업의 금융여건이 완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업종별 체감은 다를 수 있다.

또한 정권교체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IRA 등 보조금 축소, 관세 증가 및 해외노동력 유입 감소, 법인세 및 소득세 변화 등 정책 변화는 가계의 구매력, 기업의 투자 등 미국의 거시경제흐름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업종 간, 업종 내 기업 경쟁구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LG경영연구원